

# 공공데이터베이스육성이 경쟁력 향상의 열쇠

The Future Competitiveness Depends on The Development of Database

장윤옥/전자신문 전자저널부 기자  
Chang Yoon-ok/The Electronic Time.  
Electronic Journal Reporter

## “정보와 사회의 꽃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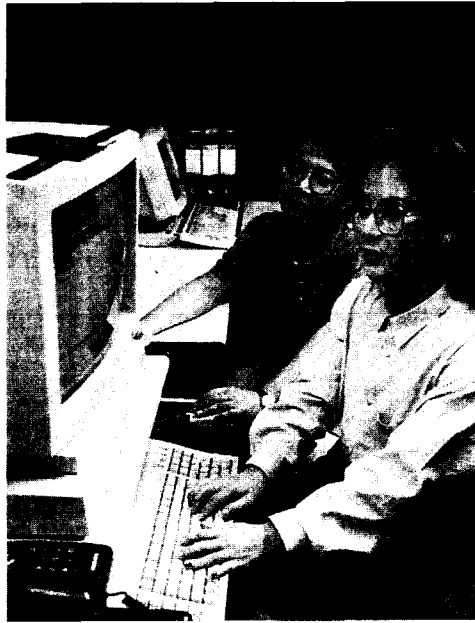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파급력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한 말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중에서도 특히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일반적 정보력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라 할 수 있다. 채신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개념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필요하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곤란한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시간과 교통 등 사회적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등 전문데이터베이스,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데이터베이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데이터베이스,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공익성’을 띠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같은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가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또 낮은 가격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수혜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편차에 따라 정보접근에 불평등을 겪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정부의 적극적 육성 필요

그러나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도 못된다. 이같은 실정에서 특히 상업성이 불투명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서 외면되기 쉬운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매나 유통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내 실정상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 상업성 오락성 위주로 진행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추진하다가 민간데이터베이스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춘 후에 민간으로 이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정보공학과 임성택 교수는 “데이터베이스선진국인 미국도 초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주도했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바뀌고 있고 유럽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도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체신부는 최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모두 8백30억원의 예산을 투입, 97년까지 4년간 매년 1백개 정도의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처도 정부차원의 행정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대외경제자료, 정기간행물 관리 등 모두 27개 기관의 53개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주도하게 되면 쉽게 데이터베이스개발을 표준화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개발의 표준화는 다른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확장이 쉽고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의 난립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미리 막을 수도 있다. 국가의 정보력을 가늠하는 공공데이

터베이스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이 과감히 공개돼야 한다. 일반개인이 방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부문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경제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안이 마련된 정보공개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더라도 일선 공무원들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사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정부부처도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료 수입을 인정한다든지, 일정책의 데이터베이스구축비를 우선 지원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질적양상 위한 노력 필요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과제선정은 1차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와 상장사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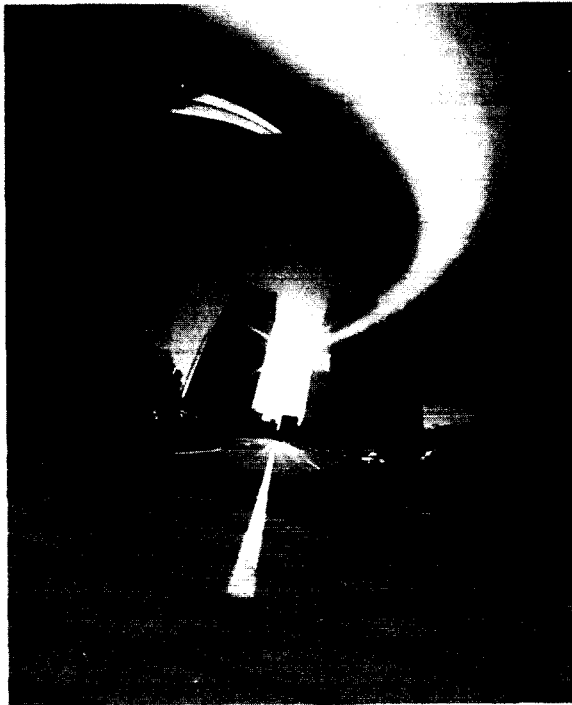
의회 지역정보화단체 등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보유정보와 생산정보 등으로 조사해 분석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체신부가 과제를 확정하게 된다.

과제가 확정되면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한국통신과 데이터베이스개발업체들이 함께 맡게 된다.

또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은 데이터베이스유통업자인 한국통신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통신은 내년 2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제안서 접수를 받고 3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해 발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의 선정은 개발능력과 개발 후 유지관리 가능성을 중시해 선정하고 대형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와 양방향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통신서비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해외관련데이터베이스 등을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공공부문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이용을 활성화 함은 물론 민간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에 대한 시장조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비추어 볼때 건수를 위주로 한 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지나치게 양적인 목표수치달성에만 힘을 쏟고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공공성이 높은 정보라도 정보의 우수성이나 경제성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이용자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화상이나 음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수한 것은 아닐 것

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재원과 시간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도 정보유통이나 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의 의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개발의 목표치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질적인 측면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수산물 시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자료의 입력자가 농수산물 시장의 관리자로 되어 있어 시장당국자에 의한 가격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정보의 신빙성이 크게 손상되고

정작 정보를 사용해야 할 대상인 농어민은 이 데이터베이스활용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통신개발 연구원의 강홍렬 연구원은 각종 가격정보데이터베이스, 부동산 관련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사람의 이해가 엇갈려 있을수록 정보의 증립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이미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 정보의 중요성과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정부당국 모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소유구조 조정해야

이와 함께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유구조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유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유지보수 추진체계까지 결정하

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의 경우 그 소유권이 개발자금을 출연한 한국통신으로 되어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관리는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유통은 한국통신이 관리하는 형태로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보제공을 꺼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을 특정한 민간기업이나 민영화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공공정보를 통해 특정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면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과 관리체계를 분리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한방법으로 모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공익적 성격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관리 개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있게 된다. **DB**

〈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시장 규모 (단위: 북미, 유럽→백만\$, 한국은 억원)

구 분	한 국	북 미	유 럽				
			영 국	프 랑스	독 일	기 타	계
시 장 규 모	739	10,208	1,690	460	355	845	3,350

자료 : 일본 데이터베이스 백서 1992